

# ‘무등산 주상절리·화순적벽’ 가치·보전상태 만족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 무등산권 실사 마무리

## 내년 4월 인증 최종 결정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의 마지막 시험 무대인 현장실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 실사단은 무등산 인근의 아름다운 풍경과 지질명소를 둘러보며 그 가치와 보전 상태에 만족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16일 “현장실사위원 안드레 아스 윌러(독일), 사리나(중국)는 시·도 공동으로 제출한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 내용에 대한 현장실사를 지난 11일 ~ 14일 지적사항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지질 및 경관, 관리구조, 지질해설 및 환경교육, 지질관광,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현장실사 결과는 올해 3월에 세계 지질과학연합에서 실시한 서류심사 결과와 종합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협의회

에서 최종 평가하고, 내년 4월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들 실사 위원은 무등산 곳곳을 걷거나 헬기를 타고 지질공원 대상 지역을 둘러보고, 서석대의 바위 표면을 휴대용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는 등 시종 긴장한 분위기 속에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실사에 동참, 실사단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허민 대한지질학회 회장(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조심스럽지만, 실사단이 현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흡족해했다”면서 “실사단은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화순적벽 등에 대해서는 호평을 쏟아냈으며 담양 기후변화체험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무등산권 운영, 지역 가공 농산물 판매 등 문화유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마을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는 지오빌리지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정신’과 부합한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5월 풍영정천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제2회 풍영정천 주민 한마음 걷기 대회 장면. <풍영정천 살리기 추진위원회 제공>

## “풍영정천 살리자” 주민단체 뜨거운 열기

### 인식조사·캠페인 활발

풍영정천을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바꾸려는 주민자치 열기가 뜨겁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풍영정천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이 협력해 새로운 자치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16일 ‘풍영정천 살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이장원)’에 따르면 ‘풍영정천 주민인식조사’ 결과를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풍영정천 환경정화와 수질오염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추진위는 환경전문가와 수안동민 등 33명이 참가하고 있는 주민자치단체다. 지난해부터 수안동, 운남동, 하남동, 월곡동 등 풍영정천 주변 5개 동 주민과 몇몇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천 살리기 운동을 하나로 통합했다. 올해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추진위는, 하천 전문가를 초청해 배우는 ‘풍영정천 톨아보기’, 환경정화를 위한 ‘풍영정천 걷기대회’, 광주환경공단 탐방 등 다양

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개한 주민인식조사도 추진위의 작품. 회의를 거쳐 직접 질문지를 만든 추진위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3주 동안 풍영정천 주변 주민 7799명으로부터 받은 설문 분석·정리했다. 추진위는 지금까지 4차례의 회의에서 추진위원과 광주시 관계자 등에게 우선 인식조사 결과를 알렸고, 하천 살리기에 대한 주민 관심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날 자료를 공개했다.

추진위 이장원 위원장은 “주민들이 바라는 풍영정천의 모습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깨끗한 하천’이었다”며 “규모는 작지만 11만명이 이용하는 하천임을 감안해 광주시가 주민의견이 반영된 풍영정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가 보장된 생태하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오는 8월 18일에는 ‘풍영정천 톨아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환경재단연구소 양해근 소장을 초청해 이

아기를 듣는다. /윤현석기자 chadol@

## 아직도...광주 청소년 근로자 절반, 근로계약서도 안 쓴다

### 광주청소년노동센터 조사

노동인권지킴이가 청년·청소년 고용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노동자 496명의 노동조건과 인권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응답자의 54.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는 손님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비율은 21.2%로 집계됐다.

특히 편의점 노동자의 경우 62.1%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고 답하고, 전체의 56.3%는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주관했다. 10~20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모집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및 폭언 등 인권유린 여부이며,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시청 1층

시민숲 행복나눔실에서 ‘노동인권지킴이 점검활동 결과 보고회’를 발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960명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인권감사단 양성교육, 노동인권 실태조사,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운영 등 청년·청소년의 노동인권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 광주시, 청년부채 긴급 지원사업 시작

광주시가 올 하반기부터 부채 압박이 가장 큰 연체자부터 긴급지원하는 ‘청년부채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3일 오후 시청 3층 협의회실에서 ‘광주지역 청년부채 해법모색 토론회’를 열고 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시청 청년부채 해법모색 토론회는 지역청년과 유관단체, 전문가가 함께 청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4개의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청년부채 실태조사 연구팀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또 광주경실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광

주 청년부채 ZERO 캠페인’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 교육비 개선방안 등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도 논의했다.

광주시청 청년부채 실태조사 연구 공동연구자인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교수, 백경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연구이사, 박수민 광주경실련 기획부장, 임희석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등 토론회자들은 국가 차원의 가계부채 및 교육비 정책을 보완하는 지자체 차원의 청년 금융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광주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담긴 실태조사 연구 결과가 마무리되는 8월 말에 3차 토론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 ‘인구의 날’ 기념식, 8명 시장 표창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1층 시민숲에서 2017년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출산장려와 임신부 건강증진, 보육환경 개선에 헌신한 기관과 시민 등 8명에게 출산장려 유공 시장표창을 수여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 하는 아빠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자체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등 29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관계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는데 힘을 기울이자는 뜻을 함께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든든육아’와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라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쳤다.

행사장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서 벌이고 있는 출산우대 정책을 홍보하는 부스 14개가 설치하고 임신부 어깨띠와 신생아 속싸개를 체험하는 체험부스를 운영해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윤정현 시장은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사회가 흔들린다”면서 “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일자리, 인구가 늘어나는 희망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재산세 이달까지 내세요...연체시 3% 가산금

광주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49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1419억원 보다 79억원(5.59%)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와 건축물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442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21억원

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379억원, 북구 362억원, 남구 193억원 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무더위 쉼터’ 1072곳 있어요

### 폭염대책 본격 가동

광주시는 연일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폭염 경보를 발령한다. 광주시의 경우 평년보다 이른 지난 5월 30일 폭염주의보가 최초 발령된 이후 지난 13일 현재 9일 동안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이처럼 폭염이 지속되자 시는 5개 자치구와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폭염대책 TF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책에 나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먼저 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무더위 쉼터’를 1072개소(전년 736개소) 지정하고 방방비 2억3000만원(1개소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민간 지역자율방재단이 시설 점검을 담당하고 관에서 행정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무더위 쉼터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조를 위해 온열질환자 구급장비 등 9종을 비치한 구급차 29대를 운영하고, 독거노인 폭염대비 건강수칙, 온열질환자 응급조치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6년간 광주에서는 온열질환자 281명 발생, 3명이 사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급 매”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신안다리 옆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즉시 입주가능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 - 1억 3천만원
- 매매 - 1억 5백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나주,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